

웁길까? 자를까?...개인적 판단에 달린 ‘가로수 운명’



마구잡이 벌목에
몸살 앓는 가로수

〈중〉 나무 철학이 없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가로수 조성·관리 실태는 자치구들의 ‘도시숲’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관리 현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광주 모 든 자치구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로수를 심고 이식 하거나 베어내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제대로 마 련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 등의 자문도 제대로 이 루이지 않는가 하면, 자문 여부도 자치구 임의적으 로 결정하는 무계획·무책임한 도심 가로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조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가로수 벌목·이식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기는 커녕, 생태적 특성을 따져보는 심의나 공론화 과정도 마 련하지 않았고 대부분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 가로 수를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5년 간 가 로수 조성·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도시숲 등 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고작 2차례에 불과했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광주시 내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 수립·변동에 관한 사항, 신규 가로수 조성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 역성, 수종 선택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광주시는 도시숲·조경 분야 전문가와 학계, 시민 단체, 주민대표 등 외부위원 12명과 시 공무원 내 부위원 3명으로 위원회(임기 2년)를 꾸리고 있 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2024년 1회, 2025년 1회 열릴 게 전부다. 5년 간 1032그루가 베어나갔고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 관리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
5년 동안 단 2차례 개최 그쳐
벌목·이식 논의는 한 건도 없어
공사 우선에 이식 환경 보장 안돼
관리 규정도 자치구마다 제각각

899그루가 옮겨심어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식되 고 벌목해야 하는 지를 대부분 전문가 자문 없이 결 정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광주시가 2차례 연 심의위원회에서도 가 로수 이식·벌목과 관련한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도심 가로수 벌목과 이식 계획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자치구별 개별 협의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한 일은 고작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가로수 관리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다. 연차별 가 로수 관리 계획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현 장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고민 없이 이식·벌목이 결 정된다는 점에 서다.

자치구별 검토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 자치구별로 광주시 동·서·북구에서 최근 5년간 1차 례씩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전부다. 대부분 전문가 자문이나 주민 공청회 등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자치구 담당자 가 가로수 벌목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있으니 좀쳐 럼 자문 절차를 밟을 일이 없다는 것이 자치구 관계

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형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가 광주시에 가 로수 벌목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실제로 가동된 사례 는 최근 5년 사이 전무했다.

광주시는 자치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도 무시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광주시 동구는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과 정에서 가로수 58그루에 대해, 서구는 중앙2지구 개발 과정에서 가로수 70그루에 대해 벌목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 자체 판단하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니 가로수 이식도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쉽지 않다.

벌목이 아닌 이식을 할 경우, 각 자치구는 별도로 정해진 장소 없이 각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나 유 휴부지 등지에 무작위로 분산 이식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식할 가로수 그루 수와 필요 공간이 매번 다르다 보니, 상황에 맞춰 이식 장소를 그 때 그 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식 공사로 이식을 위한 환경이 보장되 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대로 이식하 려면 최소 2~3년 전부터 ‘뿌리돌림 (이식 전 뿌리를 절단해 잔뿌리를 내리게 한 뒤 일정 기간 후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단기간에 결정되거나 시행되며 이런 과정은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장정원 담양국립정원문화원 운영지원실장은 “공 익적 가치가 큰 가로수는 가급적 보존·이식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나무보다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 나무를 벨 수밖에 없다”며 “현행 법규와 조례, 규정 은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비용 논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제봉로 동구청 앞 교차로의 가로수에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가지가 모 두 잘려 나간 나무들이 앙상한 모습으로 즐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제작 과정 결함 사고 전 4년간 5차례 안전개선조치 받았다

정준호 의원, 국토부 자료서 확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에 장착됐던 엔진 기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사고 이전 4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이 국토교통 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보 잉 737-800에 장착된 엔진 기종 ‘ATA 72’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의 안전 개선조치(AD)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자동차의 ‘리콜’과 유사 한 개념으로, 항공기와 엔진, 부품 등의 제작 결함 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정비 등을 제작 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당 기종에서 안전개선조치가 이뤄진 항목은 동 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 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 등 이다.

5회의 안전개선조치 중 긴급한 조치(E)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7 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 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기 엔진의 안전개선조치 이 력이 확인된 만큼,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 다”며 “사조위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악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4월부터 경찰 요구시 따라야

4월부터 운전 중 단속 경찰관이 악물 측정을 요 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 통법 개정에 따른 ‘악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 는 등 ‘악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악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악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 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 라고 밝혔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 지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 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중수청법,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

참여연대·민변, 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법 률가 단체 등이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을 철회할 것 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권한을 제 도적으로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 찰 개혁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확대 된 점과 관련,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이 추가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거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선거관리 주무부 서인 행정안전부 소속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약 범죄는 국가 수사본부와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이버 범죄 는 범죄 자체를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과거 시행 령 통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

이들은 또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 로 이원화한 데 대해 “법조인들이 형사사법에서 의 우위를 고수하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 사소송법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건지 아닌 지를 결정하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꼬집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과
전 국민의 경제발달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스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소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A 보험GA협회
한국보험협회